

“北원전 지원 의혹, 文대통령 직접 밝혀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1월31일 청와대부수대 앞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대표들과 문재인 정부의 원전 경제성 조작과 민간인 사찰, 대북 원전 상납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가운데 1월31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수대 앞에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원전게이트 진실을 이실직고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더 이상 법적 대응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라”며 “우리나라에선 탈

나경원 “우리는 탈원전 외치고 북한에 원전 상납했다”
 오세훈 “비겁하게 전 정부 타령...특검 직접 요청하라”
 안철수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추진해야 할 중대 사안”

원전을 외쳐놓고, 정작 북한 앞에서는 원전 상납을 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지금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그저 거대한 원전게이트일 뿐”이라며 “이적, 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핵개발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핵 발전을 제공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적 아니고서야 무엇이 이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자신 있으면 2018년 4.27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밝혀라”라며 “청와대가 인정했듯, 문 대통령이 ‘신 경제구상’이라며 에너지 발전 협력 내용이 담긴 USB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이 담겨 있던 것인가”라고 물었다.

오 전 시장도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비겁하게 또 전 정부 타령인가. 북한 원전 의혹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라”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야당 대표가 북한 원전 의혹 문제를 제기한 지 이틀이나 지났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청와대의 대응은 대변인이 야당 대표를 겁박한 기자회견이 전부다. 그리고 야당 의원을 통해 비겁하게 또 박근혜 정부 타령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무엇을 숨기려 하나. 무엇이 두렵나”라며 “우리 국민들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쳤다고까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 앞에 진실이 무엇인지 사실관계와 경위를 소상히 밝혀달라”라며 “진정 떼땀하다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직접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도 오 전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추진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며 “전후 사정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볼 때는 국정조사나 특검까지도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김종인 ‘이적행위’ 발언 논란

與 “억측” vs 野 “공포정치”

여야는 지난 1월 30일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이를 ‘이적 행위’로 규정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터무니 없는 억측이자 4·7 재보궐선거에서 북풍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책임을 취하라고 압박했고, 야당은 제1야당 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공포정치’라고 반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발언을 읽고 제 눈을 의심했다”면서 “너무 턱없는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추진됐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냐, 국가 운명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

다 틀어막고 침묵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후진 정치,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급한급한가 보다. 뭔가 뒷통 걸렸다는 뜻”이라며 “원전 게이트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뽀요이스 북원주의 진실을 밝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뽀요이스 파일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담긴 문서라고 보는 게 상식 수준의 추정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이를 비판하는 야당 대표를 두고 북풍공작, 흑세무민이라 하면서 법적대응을 한다고 한다”며 “드러난 증거만 봐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건 초등학교도 생각할

이낙연 “내 눈 의심...설마 선거 때문인가”

유승민 “野 비판에 말꼬리 잡고 적반하장”

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설마 보궐선거 때문에 그토록 어긋난 발언을 하신 거냐”라면서 “김 위원장께서 본인의 발언을 책임있게 정리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2018년 2번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과정을 앞에서 지켜봤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원전 건설은 단 한마디도 언급된 적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린다.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상상력이라는 조미료를 다량으로 투입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이적행위로까지 꿩맞춘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감사원-국민의힘-검찰-언론-김종인으로 이어지는 아주 잘 짜인 시나리오와 각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법적대응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대표의 입마져 틀어막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파일 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야당 비판의 말꼬리를 잡고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 건 도둑이 제발 저런 격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1월29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장에서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 문건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북풍공작과 다름 없다”고 맞섰다.

공개된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3명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와 관련한 감사가 이뤄지기 하루 전날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 530여개를 지웠다고 파악했다. 이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60pohjois(뽀요이스)’라는 폴더가 등장한다. 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뉴스

장혜영 “김종철 고소 안한건 정의당 신뢰 있기 때문”

성추행 공개 5일 만에 공개 석상 “당 통한 공동체 해결 방식 선택”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1월30일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로 “스스로 회복에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정의당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KBS 뉴스9 앵커초대석에 출연해 “형사 고소는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명확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고소가 아닌 당을 통한 ‘공동체적’ 해결방식을 선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이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후 5일 만에 피해자

인 장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 의원은 “일각에서는 제가 공인으로서 책무를 생각할 때 형사 고발해서 가해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다는걸 알고, 또 공감도 하지만 일상 회복하는 길에 있어 저에게 가져다줄 여러가지 고통들, 쏟아질 2차 가해와 여러가지 관심, 또 지난한 재판과정에서 겪어야할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당이 책임감 있게 응답해줬고, 가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당은 엄중하고 가장 큰 조치인 제명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의당의 대응에 깊은 신뢰를 표했다.

그는 ‘오늘 방송 출연은 일상 회복의 선언인가’라는 질문에 “일종의 그런 선언으로 봐도 좋다”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걱정, 응원, 그리고 위로 많이 보내주셨다. 감사하던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했다”라고 답했다.

그는 성추행 사실을 공개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에 대해 “공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의 지위는 공당의 대표이고, 성추행 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공개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서 “(내가) 피해자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점, 피해자인 나를 숨기면서 의원으로서 소명을 지키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았



다”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많이 알려진 사건일수록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인정할 만한 피해자 모습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의정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는 “코로나로 정치권이 풀어야 하는 숙제 많다. 그 안에서 제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했다.

뉴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